

충남 이주민인권 실태와 과제

이수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이주민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 민족,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아가는 본격적인 '다인종·다민족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이주민들을 단지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고, 이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충남의 이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민 인권의 실태

현재 충청남도의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처해 있는 인권의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의 양적인 증가와 구성의 다양성으로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우선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편의상 이주민들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1) 이주민의 안정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입국 전, 그들이 생활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한국과 작업장,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채로 입국하여 한국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익숙하지 못한 일로 인해 작업장에서 산재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초기의 중매업소를 통한 1(남성) 대 다(여성)의 반인권적 결혼은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

편이다.

이들은 입국 전의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한 기본 정보제공 및 교육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3일 간의 교육만 받고, 각 직장으로 이동하여 기본적인 직업 훈련 없이 바로 작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언어를 교육하여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의 미비하여 결혼 후 시댁이나 마을 주민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주민들은 입국 전후의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해 겪는 생활의 어려움 이외에도, 우리사회에 정책해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민간의 제도와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임금체불,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공공 및 민간단체(NGO)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생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은 그들이 살았던 체제가 우리사회와는 다르고,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도움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수동적인 생활자세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복지사들은 법률·행정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한 체제 및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로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 난방 제한, 온수 사용 제한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비 취약 등 여성의 안전 고려하지 않는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편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의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숙소로 비닐하우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낮설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무엇보다 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이주노동자들이나 이주 여성의 경우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를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기본적인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건강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임신이나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및 육아에 필요한 필수적 진료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인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용이 상승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체류의 안정성과 기본적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직장을 옮기고자 할 때, 고용주의 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를 견뎌야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고용 허가 기간 이후 재계약 절차가 복잡하여 재입국의 불안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불법채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1년~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차별적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사회의 이주민들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과는 다르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는 많이 사라졌으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열등한 국민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식은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육체적 폭력 문제는 많이 줄었으나 상시적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히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침해 이외에도 이주민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 문화, 특히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학제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해 교육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주민 인권의 항목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첫째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둘째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기반조성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입국 전후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회 적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 제공, 한국 생활에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입국 전후 한국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작업장이나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일을 시작하여 산재위험이 높고, 이는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매업소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전후 한국 작업 환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② 입국 이후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산재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직장 내 폭력 예방에도 효율적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문화와 언어 교육은 시택이나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충남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인간다운 거주환경의 마련, 둘째 건강권의 보장, 셋째 체류 안정성 보장, 넷째 자립역량 강화, 다섯째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운 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다운 거주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부적절한 숙소와 숙소사용에 대한 과당 요금 징수, 난방 및 온수 사용 제한, 기본적인 경비 부족 등의 문제는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 내 이주민들의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②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의료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병원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구축된 의료지원 제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혹은 확대를 통해 이주민 건강권 확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 ③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및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비자 연장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 및 직장 이동은 복잡한 절차의 문제로 체류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불법체류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지역차원에서 체류와 고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이주민의 안정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이주민의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재, 신분상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결혼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역시 경제적 곤란의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우리사회의 일원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 즉 노

등자들의 체불, 산재 등의 대응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교육 및 알선 제도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⑤ 차별과 폭력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주민들 육체적 폭력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언어폭력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종교(특히 이슬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한국은 이제 다양한 인종, 민족,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인종·다민족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세계화로 인한 이주의 증가라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고, 결혼이주여성과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한국계 외국인의 유입이라는 우리만의 특수한 현상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주민들은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시기에 혼란과 갈등을 제어하고, 사회통합과 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충남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과 구체적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주민들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주민들이 처한 인권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충남의 이주민 인권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첫째 인간다운 거주환경의 마련, 둘째 건강권의 보장, 셋째 체류 안정성 보장, 넷째 자립역량 강화, 다섯째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운 기본권의 보장 등의 영역에서 세부적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기본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면, 우리사회와 충청남도도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